

일본국내의 ‘죽도’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 구조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둘러싸고-

최 장 근*

(e-mail :nihonbu@daegu.ac.kr)

目 次

1. 들어가면서
 2.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죽도」 명시 변경경위
 3. 「죽도」 영유권 주장의 소극론자
 4. 「죽도」 영유권 주장의 적극론자
 5.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6. 맺으면서
-

1. 들어가면서

세계는 국제화, 지구화시대에 완전히 들어와 있다. 이에 동참하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져 정치, 경제면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래서 유럽 공동체와 북미지역의 NAFTA, 동남아시아의 ASEAN 등이 형성되어 역내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주변의 동아시아 각국과 갈등을 겪고 있어서 역내협력을 얻어내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정부는 전 자민당정부와 달리 이러한 상황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유엔 상임이사국이 되어 경제규모에 버금가는 국제사회의 리더가 되길 원한다. 일본은 이에 앞서 동아시아공동체를 형성하여 동아시아의 리더로서 역할을 하

* 대구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일본정치전공

려고 한다. 동아시아공동체의 형성은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의 공통된 목표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우선적으로 동아시아 각국과의 신뢰 회복을 이루어내야 한다. 이를 달성하려면 동아시아 3국 사이에 현안으로 남아 있는 일본의 역사 인식 결여, 제국주의가 확장한 영토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는 일 등과 같은 과거문제를 청산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고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위해 한국과 중국의 협조를 받아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일본 민주당정부는 이러한 현실인식을 직시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간의 독도 문제에 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한국으로부터 불신을 계속 갖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도 반드시 일본영토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에 대한 회의론도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독도영유권문제를 둘러싼 일본국내의 갈등구조를 고찰하려고 한다. 현 민주당정부는 국제화 지구화 인식이 절실함을 인정하고 독도문제로 한일 간의 분쟁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에는 적극론자와 소극론자가 혼재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일본 내에는 과거문제를 청산하려고 하는 양심적인 지식인들로 구성된 진보지식인층과 그렇지 않은 소극적인 보수지식인층으로 구분된다. 정치권에는 민주당의 진보그룹과 자민당의 보수그룹을 중핵으로 하는 갈등구조가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2009년 12월 25일 문부과학성이 2013년 전면개정을 위해 독도문제에 관해 「중학교 해설서에 입각하여 북방영토 등 영토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라고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는데, 이것을 둘러싼 일본국내의 갈등상황에 대해서 고찰하려고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없었으며, 연구방법으로는 민주당정부 이전의 양상, 민주당정부요인 및 정치권, 학계, NGO단체, 주요 일간지 등의 성향을 분석한다.

2.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죽도」 명시 변경경위

일본문부과학성은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10년에 1번씩 개정하기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2008년 7월 14일 개정내용이 발표되었고,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2009년 12월 24일 개정내용이 발표되

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을 위한 해설서에 해당한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학습지도요령」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나 수업하는 교원의 지침이 된다는 것이다.¹⁾ 따라서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주장에 관련되는 내용이 포함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적인 구속력을 갖는 「학습지도요령」에 포함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2008년 7월 중학교 사회과 해설서에서 자민당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나라와 한국 사이에 죽도²⁾를 둘러싼 주장이 다르다. 북방영토와 같이 우리나라 영토·영역에 관해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규정하고 처음으로 ‘죽도’를 일본영토라고 가르치도록 기술했다.³⁾ 이것도 사실 이명박 대통령과의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한국의 반발을 우려하여 배려한 것이라고 한다. 원래의 문부과학성의 방침은 「죽도는 우리나라 고유영토」라고 명기하려고 했던 것이다. 한국정부는 이번 일본의 중학교과정에서의 「죽도교육」의무화에 강하게 반발하여 주일대사를 일시 귀국 조치시키고, 민간교류에서도 사업을 중지하거나 연기하는 사태가 벌어져 양국의 외교관계가 악화되었다.

이 해설서가 바탕이 되어 2012년에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수정할 때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2013년부터 일본의 모든 중학교 학생들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사실 중학교 교과서는 물론이고,⁴⁾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 총 14권 중 지리 A에서 6권, 지리 B에서 5권에서 이미 「일본 고유영토 죽도에서 한국 사이에 영유권문제가 있다.⁵⁾」등으로 기술되어있다. 이처럼 일본은 학교교육에서 독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도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교육이 포함되면 의무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하다.

일본정부는 2009년 12월 24일 고등학교 지리역사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하였다. 1999년 작성되어 지금 사용되고 있는 고등학교 해설서는 영토문제에 관해 「북방영토 등 우리나라가 당면하는 영토문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을 기반으로 정확하게 다룬다.」라고 하여 독도교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 개정된 해설서에서는 「중학교의 학습

1) 「読売社説：指導要領解説書 ‘竹島’に触れないのは問題だ」, 『読売新聞』2009년 12월 28일.

2) 본고에서는 한국영토로서의 인식은 「독도」라고 쓰고, 일본영토로서의 인식은 「죽도」로 씀.

3) 전계의 「読売社説：指導要領解説書 ‘竹島’に触れないのは問題だ」.

4) 帝國書院編集部編, 新詳高等社會科地図』四訂版, 帝國書院, 1987, 이미 1980년대부터 교과서에 일본영토라고 표기되어 있음.

5) 전계의 「読売社説：指導要領解説書 ‘竹島’に触れないのは問題だ」.

을 토대로⁶⁾」라는 용어를 삽입하여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의거하여 정확하게 취급하고 이해를 심화시킨다.」라고 독도교육을 의무화했다.⁷⁾ 이에 대해 적극적인 일본의 영토론자들은 「죽도」라고 명칭을 명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일본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영유권 교육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라는 명칭의 유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2013년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일본국민에게 독도교육을 실시하게 될 것이다.

이번 민주당정부의 태도는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하여 외형적으로만 발표방법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한일관계를 우려하여 한국을 배려했다고 하지만, 영유권에 있어서 일본이 양보한 부분은 없고 오히려 종전에 없었던 독도교육을 고등학교 해설서에 명기하였던 것이다.

이번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죽도」 기술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川端達夫 문부과학대신은 「원안을 12월초 관방장관에게 보고했는데, 특단의 코멘트는 없었다. 최종적으로 내 책임으로 결정했다.⁸⁾」라고 했고, 이에 대해 관방장관은 「문부과학성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동의했다. 수상에게도 보고했다.」라고 했다. 관련내용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내년 일한병합에서 100년에 해당하는 해이기에 한국을 배려하여」 「鳩山 수상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였다.」라고 했다.⁹⁾ 이를 종합해보면, 하토야마 수상이 동아시아 공동체 구성을 실현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한국의 반발을 우려하여 문부과학성대신에게 한국의 반발을 회피하는 방법을 요청했고, 최종적으로는 하토야마 총리가 결정한 것이다.

그런데 영토론자들은 ‘죽도’의 명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영토주권에 대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였다. 이에 대해 川端達夫 문부과학대신은 「한국을 배려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교육은 우리나라가 책임진다.」¹⁰⁾ 「자국의 영토문제를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은 나의 사명이다.¹¹⁾」라고 하여 전혀 독도영유권 교육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표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平野博文 관방장관도 2009년 12월 25일 「우리나라 교과서이기에 외교적 배려할 필요가 없다.¹²⁾」

6) 「高校指導要領解説書, ‘竹島’明記せず 官邸判断」, 『朝日新聞』 2009년 12월 25일.

7) 전계의 「読売社説: 指導要領解説書 ‘竹島’に触れないのは問題だ」.

8) 「文科省: 高校の学習指導要領 ‘竹島’に触れず 解説書」, 『毎日新聞』 12월 25일, 2009년 12월 25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의 발언임.

9) 전계의 「読売社説: 指導要領解説書 ‘竹島’に触れないのは問題だ」.

10) 「高校指導要領解説書, ‘竹島’明記せず 官邸判断」, 『朝日新聞』 2009년 12월 25일.

11) 「【主張】竹島と高校解説書 固有の領土となぜ教えぬ」, 『産経ニュース』 2009년 12월 27일.

라고 하여 한국을 배려한 것이 아니고, 당당한 외교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鈴木寛 문부과학대신은 「고교에서도 죽도에 관해 우리나라와 한국의 주장. 그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독도교육을 지도하게 된다.」라고 하고, 「우리나라의 고유영토이고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 「영토문제로서 북방영토를 기술하면서 독도를 직접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 지도요령에 대해 현장재량을 확대하는 ‘대강화(大綱化)’를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¹³⁾ 그러나 「문부과학성 내에서 중학교와 같이 ‘죽도’라는 명칭을 고려하기 했지만, 平野博文 관방장관 등의 판단으로 최종적인 문구가 결정되었다.¹⁴⁾」라고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외형적으로 배려처럼 보이는 것은 한국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이는 민주당정부의 외교적 성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鳩山수상도 「2008년 민주당 간사장시절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죽도가 기술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鳩山수상은 죽도영유권 표기에 찬성했고 방법론에서 최대한 한국의 반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이는 平野가 「중학(해설서)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중학교와 고교 교과서 해설서에 대한 하토야마의 인식은 부합한다.¹⁵⁾」라고 했던 것으로도 알 수 있다.

사실상 이들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내용상의 차이가 전혀 없다. 하지만 표현을 달리한 것에는 한국과의 분쟁을 최소화 하겠다는 하토야마총리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주당정부의 정책에 대해 한국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있다」고 하여 2008년도의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와 달리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외교적 성공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외교적 실책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이유는 일본의 의도대로 해설서에 정부교육의 방침이 결정되어 향후 구속력을 갖고 개정될 학습지도요령에서는 독도교육이 기정사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은 ‘죽도’ 영토화정책을 한층 더 가속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12) 기자회견 내용, 「竹島の不記載「外交的配慮ではない」 高校学習指導要領解説書で官房長官」, 『産経ニュース』 2009년 12월 25일(2009년 12월 29일 검색).

13) 「文科省：高校の学習指導要領「竹島」に触れず 解説書」 『毎日新聞』 2009년 12월 25일.

14) 「高校指導要領解説書, 「竹島」明記せず 官邸判断」, 『朝日新聞』 2009년 12월 25일.

15) 「竹島の不記載「外交的配慮ではない」 高校学習指導要領解説書で官房長官」, 『産経ニュース』 2009년 12월 25일(2009년 12월 29일 검색).

3. 「죽도」 영유권 주장의 소극론자

(1) 민주당정부 이전의 양상

일본 국내에는 독도영유권이 일본에 없다고 하는 입장을 가진 부류가 있다. 역사학자로서 독도를 연구하는 자, 양심적인 지식인, 국제법학자, 국제정치 및 지역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도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있다.

대표적인 역사학자로서는 山辺健太郎(1965)¹⁶⁾, 梶村秀樹(1978)¹⁷⁾, 堀和生(1987)¹⁸⁾, 内藤正中(2000이후)¹⁹⁾ 등이 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로서의 권원이 부족하고, 오히려 한국영토로서 권원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양심적인 지식인들 중에는 佐藤正人 등은 독도는 일본제국주의가 침략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이 지역은 카이로,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조선해방과 더불어 한국영토로 반환된 것이라는 인식이다.²⁰⁾ 국제법학자 중에는 芹田健太郎²¹⁾은 영유권을 한국에 인정하는 대신에 독도를 공동으로 관리하자는 주장이다. 지역학 연구자로서는 和田春樹, 大西俊輝²²⁾가 공동 관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과거부터의 연구축척에 의한 것이고, 더 나아가 최근에 와서 새로운 사료들이 발굴됨에 따라 이들의 주장들을 더욱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들 역사학자들의 인식은 양심적인 지식인들에게 파급되어 일본의 ‘죽도’ 영유권의 소극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²³⁾ 따라서 향후에도 새로운 사료가 발굴되고 이들 연구 성과가 한층 대중화됨에 따라 일본영토로서의 부정론이 한층 가속화될 것이고, 동시에 한국의 독도영유권은 더욱 공고화될 것이다.

(2) 민주당정부와 정치권

민주당은 야당시절 독도영유권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할 만큼 독도에 대한 적극적인 영토론자인 자민당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2008년 자민당정부가

16) 山辺健太郎,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コリア評論』第7巻 第2号, 1065년 2월, pp.4-14.

17) 梶村秀樹, 『竹島=独島問題とは何か』, 『朝鮮研究』第182号, 1978.

18) 堀和生,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第24号, 1987.

19) 内藤正中,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韓関係史』多賀出版, 2000.

20) 佐藤正人, 『国民国家日本の独島占領—第7次国際歴史教科書学術会議総合報告書・世界化時代の歴史学教科書』国際教科書研究所, 1996

21) 芹田健太郎, 『日本の領土』中公叢書, 2002, 芹田健太郎, 『島の領有と経済水域の領域画定』有信堂, 1999.

22) 大西俊輝, 『日本海と竹島—日韓領土問題』東洋出版, 2003.

23) 예를 들면, 文理閣出版(京都)사장으로부터 内藤正中 교수의 독도역사관이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필자에게 한국측의 독도영유권 인식에 관해서 도서출간을 희망한다고 권유받은 적이 있었음.

중학교교과서에 독도교육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 잘못된 영토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대외정책의 방향은 대미일변도의 외교정책에서 탈피하여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하여 역내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만이 일본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²⁴⁾ 민주당의원 중에서는 이를 위해서는 죽도 영유권 주장으로 한일관계를 악화시킴으로써 일본에 대해 불신을 갖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이도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小澤一郎나 鳩山由起夫 등이다. 이들은 과거 야당시절 야당입장에서 정부여당인 자민당을 공격하기 위한 재료로 이를 활용했던 부분이 있었기에 실제의 인식보다 과도하게 표현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과거 자민당정부의 적극적인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小澤 간사장은 2008년 11월 3일 민주당대표시절 일본의 東洋대학 축제행사의 일환으로 행해진 「일만 인의 네티즌회견」 프로그램에 출현하여 「나는 죽도는 일본영토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한국은 한국대로 그것을 한국영토라고 주장하여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요. 현실적으로 일본의 주장을 가지고 분명하게 한국과 마주앉아서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일본 네티즌들은 「왜 일본영토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가?」라고 비판을 받았다.²⁵⁾ 또한 하토야마 수상은 야당시절 2006년 5월 4일 민주당 간사장 시절 한국을 방문하여 「독도문제(측량선 파견)는 일본의 외교적 실패, 일본 측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해야한다.」라고 하여 독도가 역사적으로 일본영토로서의 근원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발언했다.²⁶⁾ 이외에도 시마네현의원 古室壽明는 민주당의원 중에는 독도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여 한국과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다소 존재한다.²⁷⁾

사실 민주당 내부에는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찬성하는 그룹은 없다.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과 하토야마 총리도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에 대해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정권 차원에서 한일관계의 악화를 우려해서 일본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일 것이다.

하토야마 수상은 야당시절 중학교해설서에 죽도가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에 한국이 반발했을 때 ‘명기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본국내에서는 이번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적극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

24) 최장근, 「일본민주당의 독도정책에 관한 분석」, 제주평화연구원편, 『동아시아평화의 미래』 한국학술정보(주), p.257.

25) 전계의 최장근, 「일본민주당의 독도정책에 관한 분석」, p.255.

26) 전계의 최장근, 「일본민주당의 독도정책에 관한 분석」, p.255.

27) 전계의 최장근, 「일본민주당의 독도정책에 관한 분석」, p.267.

「그(야당시절) 발언과의 整合性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²⁸⁾

일본여론의 비판과는 달리 이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내용은 하토야마의 야당시절이 발언과 모순되지 않는다. ‘죽도’라는 직접적인 용어사용은 회피했지만, 결국은 일본영토로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되었던 것이다.

(3) NGO단체

일본에는 보수주의자들의 한일관계에 있어서 강경한 태도를 비판하는 그룹이 존재한다. 이들은 일명 양심적인 지식인그룹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도영유권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홋카이도교직원조합은 NGO단체로서 처음 공식적으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비판했다.²⁹⁾

일본 北海道の 교직원단체인 ‘홋카이도교직원조합’은 2008년 11월 28일 발행한 기관지 ‘홋쿄(北教)’에서 독도에 대해 「한국의 주장이 사실에 따르고 있다」.³⁰⁾ 라고 하여 「다케시마 문제는 한국의 주장이 옳다. 시마네(島根)현 등이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위는 일본의 침략·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³¹⁾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옳다고 하는 내용을 담은 기관지를 일선 학교에 배포했던 것이다.³²⁾

홋카이도는 과거 아이누민족의 삶의 터전으로서 일제의 침략으로 일본영토에 편입되었던 지역이다. 그들은 이러한 역사성 때문에 과거 일본정부가 제국주의시절 타민족을 침략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식을 항상 갖고 있다.

(4) 중앙일간지 「朝日新聞」

일본의 중앙일간지 중에서 「아사히신문」은 진보적인 성향으로 한일관계를 가급적이면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독도문제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죽도는 한국에서는 독도라고 칭한다. 역사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우리나라 고유영토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변함없는 입장이다. 한편 이 섬은 식민지배 과정에서 부당하게 침략 당했다고 하는 것이

28) 전계의 최장근, 「일본민주당의 독도정책에 관한 분석」, p.267.

29) 「日 홋카이도 교직원조합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맞다”」, 『세계일본』 2009년 12월 27일(2009년 12월 27일 검색), 매달 두 차례 발행되며 조합소속 교사 수만 명에게 배포됨.
<http://www.segye.com/>.

30) 전계의 「日 홋카이도 교직원조합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맞다”」.

31) 전계의 「日 홋카이도 교직원조합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맞다”」.

32) 전계의 「日 홋카이도 교직원조합 “한국의 독도 영유권 주장 맞다”」.

한국입장이다. 따라서 한국은 영토분쟁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격렬하게 반발한다. 양국 사이에서 ‘영토’와 ‘역사’가 복잡하게 얽힌 죽도에 관해서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까? 아주 어려운 문제이다.」라고 하여 한일양국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소개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엿보인다.

이번 문부과학성이 공표한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내용에 대해서도 「죽도라는 2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학교의 학습을 기반으로’라는 애매한 표현을 취했다. 고등학교에서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죽도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여름 결정된 중학교 해설서는 분명히 죽도라고 명기하여 ‘일한 사이에서 서로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언급하여 우리나라 영토에 대해 더 자세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福田정권 시절에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공표되었을 때, 한국은 주일대사를 귀국시키는 등 일한관계가 일시적으로 악화되었다.」³³⁾라고 하여 사실을 그대로 소개하려고 노력했다.

하토야마 정부와 이명박 정부 사이의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이번 표현상의 궁리로 ‘죽도’라는 명칭의 명기를 피한 것은 아시아외교의 중시를 내걸고 있는 鳩山정권의 배려일 것이다. 한국정부는 간접적으로 영유권을 주장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지만, 반응을 자제한 것 같다. 10월 정상회담에서 鳩山由紀夫 수상은 ‘역사를 바르게 직시해야한다.’라고 명언했다. 이명박 대통령과는 ‘미래지향’적인 협력의 강화를 서로 확인했다. 한국 측은 지금까지의 정권과는 다른 태도를 표명하고 있는 鳩山 정권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 내년은 일본이 한국을 병합한 후 100년이 되는 해이다. 한국에서는 식민지배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한 시점에 이 문제로 양국관계가 악화되는 것만은 피하고 싶다. 이 섬을 역사문제와 관계 지어 반발하는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죽도를 둘러싼 한일양국의 대립을 넘어 양국관계가 친숙해져있다.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³⁴⁾」라고 하여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명하려고 했다.

그런데 「교사는 이번 해설서를 참고하면서 수업을 계획하게 된다. 영토문제에 대해 일본의 입장을 바르게 배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게다가 다른 나라와의 분쟁이 있는 것은 상대의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르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새로운 해설서는 이러한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³⁵⁾」라고 하여 이번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죽도교

33) 「竹島問題—教えることの大切さ」, 『朝日新聞』 2009년 12월 27일, 사설

34) 전계의 「竹島問題—教えることの大切さ」.

35) 전계의 「竹島問題—教えることの大切さ」.

육을 의무화한 것은 올바른 교육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이번 해설서가 아사히신문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양국의 입장을 개관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개정되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까지 독도문제는 일본이 자신의 주장만 강조하고 한국 측의 주장을 부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죽도를 둘러싼 한국의 주장을 이해하는 것은 그 배경이 된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를 이해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수학여행지로 한국을 선택하는 고등학교도 증가하고 있다.」 「잘못된 역사와 미해결문제가 있다는 것을 배우고 게다가 좋은 우호관계를 구축하고 동시에 이러한 젊은이들의 교류를 확대해가는 것은 지금이야말로 절실하다.」 라고 지적하고 있다.³⁶⁾ 그러나 이번 해설서가 순수한 의미에서 분쟁지역을 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독도도 일본영토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문제이다. 전후 독도문제를 둘러싼 한일관계를 보더라도 독도영유권 교육은 한일관계를 분쟁으로 모는 교육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이러한 관점을 놓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아사히신문도 일본신문이라는 한계를 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4. 「죽도」 영유권 주장의 적극론자

(1) 민주당정부 이전의 양상

2009년 민주당정부가 탄생하기 이전, 자민당정부가 줄곧 정권을 담당하여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매년처럼 한일관계가 냉각되어 외교적 협력을 이루어지 못했다. 자민당정부를 비롯한 적극적인 영토론자들은 ‘죽도’ 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은 외무성관료였던 川上健三가 집필한 『竹島の領有』(1963)³⁷⁾와 이를 보완한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1966)³⁸⁾, 奥原碧雲의 『竹島 및 鬱陵島』(1906)³⁹⁾에 의존하고 있고, 또한 시마네현의 문서과장으로 있던 田村清三郎가 집필한 『竹島問題の研究』(1955)⁴⁰⁾, 『島根縣竹島の新研究』(1965)⁴¹⁾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 게다가 국제법학자로서

36) 전계의 「竹島問題—教えることの大切さ」.

37) 川上健三, 『竹島の領有』外務省条約局, 1963년 8월.

38) 川上健三, 『竹島の歴史地理學的研究』古今書店, 1966.

39) 奥原碧雲, 『竹島及鬱陵島』報光社, 1907.

40) 田村清三郎, 『竹島問題の研究』島根県総務部広報文書課, 1955.

41) 田村清三郎, 『島根縣竹島の新研究』島根県総務部総務課(松江), 1965.

는 高野雄一가 쓴 『日本の領土』⁴²⁾가 있다. 이들 독도관련서적의 집필자들은 모두 외무성 및 ‘죽도’ 관할관청인 시마네현의 관료로서 일본의 국익을 대변하기 위해 한국 측의 주장을 부정하고 사료를 왜곡 해석하는 방법으로 일본 영토로서의 논리를 개발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는 독도의 본질을 왜곡한 책임자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도 영유권론자들은 일본영토로서의 정당한 권원으로서 죽도 영유권을 주장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과거 자민당정부에서 외무성관료들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실효적으로 독도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매스컴에서도 무비판적으로 영유권을 선동하였다. 그 결과 2008년 자민당정부에서는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 해설서에서 ‘죽도’ 교육을 의무화했던 것이다. 최근 이들의 이론을 답습하여 영유권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영유권론자는 下條正男이다. 그는 이들 관료들이 조작한 논리를 바탕으로 사마네현청 및 현의회 그리고 현민사회를 선동하여 2005년 「독도의 날」을 제정하도록 했다. 또한 시마네현의 지원을 받아내어 「죽도문제연구회」를 만들어 영유권운동을 선동했다.⁴³⁾ 죽도문제연구회는 2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web 죽도문제연구소」⁴⁴⁾를 설치했고, 2010년에는 제2기 죽도문제연구회를 발족하여 계몽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⁴⁵⁾

(2) 민주당정부

민주당정부는 전 자민당정부를 비판하면서 출범했다. 자민당정부의 ‘죽도’ 영유권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새로이 출범한 민주당정부가 아무리 ‘죽도’ 영유권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익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입장에서 국가주권과 관계되는 「죽도 영토주권」을 한꺼번에 포기선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정부에서도 부득이 종전 외무성의 「竹島問題」⁴⁶⁾에 대한 입장을 바꿀 수 없을 것이다. 이는 川端達夫 문과대신이 「자국의 영토문제를 아이들에게 바르게 이해시키는 것은 우리들의 사명이다.」라고 했던 것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⁴⁷⁾

42) 高野雄一, 『日本の領土』東京大学出版会, 1962. 太寿堂鼎, 『領土帰属の国際法』東信堂, 1998. 塚本孝,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第2版〕」, 『調査と情報』第289号, 国立国会図書館, 1996.

43) 竹島問題研究所編,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竹島問題研究所, 2007년 3월, 竹島問題研究所編,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中間報告書—』竹島問題研究所, 2006년 3월.

44) 「web 竹島問題研究所」, <http://yahoo.co.jp/>

45) 2009년에는 다시 「죽도문제연구회」를 재가동하여 적극적으로 정부차원의 죽도영유권 운동을 선동하고 있음.

46) 「竹島問題」, <http://yahoo.co.jp/>

47) 「【主張】竹島と高校解説書 固有の領土となぜ教えぬ」, 『産経ニュース』2009년 12월 27일.

하지만 정부의 외교정책상 적극적으로 ‘죽도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는 한 언론사가 지적한 것처럼, 「한일 관계는 역대 어느 정권 때보다도 좋지만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만큼은 전혀 변함이 없다. 일본 정부는 오늘 독도의 일본 영유권 주장을 고수하면서도 독도라는 표현을 명기하지 않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고등학교 새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발표했다.»⁴⁸⁾라는 식으로 ‘죽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외형상으로는 소극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정부의 ‘죽도’ 영유권에 대한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정부의 ‘죽도’ 정책에 관해 문부과학성 심의관 도쿠히사 하루히코는 각 자치단체 교육위원회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⁴⁹⁾

즉, 「학습지도요령의 취지의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학교현장의 선생님들께서 확실히 지도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배포된 것은 고교 지리·역사 과목 해설서입니다. 영토 문제에 대해 ‘중학교에서의 학습에 입각해 일본의 입장을 정확하게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명시됐습니다. 지난해 중학교 사회과목 해설서는 독도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며 러시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영토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의 죽도 영유권 주장은 전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이 해설서를 배포하면서 지난해 한일 간의 갈등을 촉발시킨 문제의 중학교 사회과목 해설서 내용을 첨부 자료로 만들어 함께 배포했습니다. 여기에다 영토문제는 상대국을 배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시다.」고 했다.⁵⁰⁾ 또한 관방장관 히라노 히로후미는 「이것은 일본 교과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배려할 그런 것이 아니고, 사고방식으로서 일본 국민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쳐 가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했다.⁵¹⁾ 또 문부과학상 가와바타 다쓰오는 「일본이 새로 발행하는 고교 교과서 해설서에서 ‘죽도’라는 표현을 직접 하지 않은 것을 놓고 해석상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죽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로, 정당하게 인식시키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고교 해설서에 독도를 명기하지 않은 것은 보다 간결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미 죽도가 일본 영토라고 명기돼 있는 중학교 해설서를 가리켜 ‘중학에 입각해서’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라고 했다.⁵²⁾ 그리고 문부과학성은

48) 「일본의 성탄 선물...’독도 영유권 고수’」 『YTN』, 2009년 12월 25일(2009년 12월 27일 검색), http://www.ytn.co.kr/news/theme_view.

49) 전계의 「일본의 성탄 선물...’독도 영유권 고수’」.

50) 전계의 「일본의 성탄 선물...’독도 영유권 고수’」.

51) 전계의 「일본의 성탄 선물...’독도 영유권 고수’」.

52) 전계의 「일본의 성탄 선물...’독도 영유권 고수’」.

2009년 사이에 세계 공유의 동영상 인터넷 사이트인 유튜브 등을 통해 ‘죽도’가 일본영토라고 홍보를 강화했다.⁵³⁾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입장도 마찬가지로 ‘죽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강경하다. 민주당 내부에는 다양한 성향의 의원들이 소속되어있지만, 보수적인 의원들 중에는 ‘죽도’ 영유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⁵⁴⁾ 민주당은 2009년 총선 공약집에서 독도에 대해서 러시아와 분쟁을 벌이고 있는 북방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이 영토주권’을 갖고 있다고 명기했다.⁵⁵⁾

이를 보더라도 민주당정부의 독도정책은 전 자민당정부의 정책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외교상으로는 한국정부에 대해 나름대로 배려했다고 주장할 것임에 분명하다.

(3) 관할 관청의 시마네현

시마네현은 2005년 「죽도의 날」을 제정한 이래, 매년처럼 기념행사를 실시하여 ‘죽도’ 영유권 운동을 선동하고 있다. 시마네현 溝口善兵衛 지사는 이번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서 죽도 명칭이 누락된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문부성에 대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죽도 명칭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명기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한편 ‘중학교의 학습을 기반으로’라는 기술이 있다. 이는 문부과학성이 고등학교에서도 죽도에 관해 중학교와 같이 지도가 행해진다고 하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기반으로 전국 고등학교에서도 죽도문제에 관해 적절하게 지도될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⁵⁶⁾라고 했다.

또한 ‘죽도영토권확립 시마네현의회의원연맹’ 細田重雄 회장은 「전의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이어서 또 기술되지 않았다. 작년에 개정된 중학교사회과 학습요령해설서에는 불충분하지만 죽도라는 도명이 기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명칭조차도 기재되지 않았던 것은 지극히 유감스럽다.⁵⁷⁾」라고 하여 일본정부의 ‘죽도’에 대한 영토의식의 결여를 우려했다.

시마네현은 ‘죽도’를 관할로 하고 있는 자치단체로서 역사적인 경위보다는

53) 「일본, 독도 영유권 고수 발표에 망언까지 -하토야마 정권은 독도 영유권 교육을 고수 발표」, 『THE TIMES』 2009년 12월 26일(2009년 12월 27일 검색),

<http://www.thetimes.kr/news/article.html?no=6190>

54) 전계의 최장근, 「일본민주당의 독도정책에 관한 분석」, p.263.

55) 전계의 「일본, 독도 영유권 고수 발표에 망언까지 -하토야마 정권은 독도 영유권 교육을 고수 발표」. <http://www.thetimes.kr/news/article>.

56) 「高校指導要領竹島明記せずで島根縣知事がコメント」, 『産経ニュース』 2009년 12월 25일.

57) 「竹島」明記せずで竹島領土権確立島根県議員連盟, 政府に説明を求めたい, 『産経ニュース』 2009년 12월 25일.

현민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영토화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에 대해 ‘죽도’의 영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종용하고 있다.⁵⁸⁾ 시마네현의 ‘죽도’ 정책을 선동한 인물은 下條正男이다. 그는 2005년에 「죽도문제연구회」를 발족하여 사료의 왜곡해석으로 일본적 논리를 조작하는 2년간의 업무를 종료했는데, 다시 시마네현은 물론이고 일본정부에까지 ‘죽도’ 영토화정책을 선동하기 위해 다시 「죽도문제연구회」를 가동하고 있다.

(4) 중앙 일간지 「産経新聞」

이번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논란에 관해 산케이신문의 보도 상황을 분석해보기로 한다. 산케이신문은 이번 일본정부의 독도정책을 비판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본래의 의도를 달성하여 한일관계의 악화를 최대한 막았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대외정책에 있어서 유리한 지위를 확보한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우선 「고등학교의 새로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영토문제에 관해 죽도(島根縣)가 명기되지 않았다。」라고 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실제로는 「중학교 지도요령 해설서에 의거하여 교육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기되어있어서 고등학교에서도 죽도교육을 의무화하도록 규정되어있다.

또한 「하지만 이번 고등학교용에서는 죽도라는 명칭을 언급하지 않고 ‘중학교의 학습을 기반으로’라는 애매한 표현을 했다. 무엇을 배려한 것일까? 이것으로는 어느 나라 영토인지를 알 수 없다. 北方領土와 함께 죽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야한다」라고 하여 ‘죽도’가 일본영토라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느 나라영토인지 알 수 없다。」고 하는 표현은 과장적인 것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이다.

하토야마정부의 독도정책에 대해서는 하토야마정부가 ‘죽도’ 교육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설서는 지도요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교과서편집이나 수업에 반영된다. 鳩山 정권에서는 처음 해설서를 개정한 것이지만, 학교에서 가르쳐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지 않는 사태는 국익에도 반한다。」라고 하여 편견적인 사고로 비판했다. 또한 「신지도요령에서는 국가나 향토에 관한 교육이 중시되었다. 민주당정권에서 이를 무시해서는 안된다。」라고 비판했다.⁵⁹⁾ 즉 민주당정부가 독도영토를 포기했다는 주장이다.

58) 下条正男,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文春新書377, 文芸春秋社, 2004. 下条正男,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 2005.

59) 전계의 「【主張】竹島と高校解説書 固有の領土となぜ教えぬ」.

한국정부를 ‘배려’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학교 해설서 개정 때에는 한국의 이명박 행정권에 대한 배려도 있고 해서 죽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하지 않았다. 고등학교에서는 더욱 후퇴한 것은 유감이다.」라고 했다. 이는 ‘죽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언급하고 있다. 일본정부도 실제로는 분쟁지역으로 보고 있는데,⁶⁰⁾ 언론사의 이러한 보도는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된다. 또한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배려’를 부정했지만, 한국의 미디어가 ‘고심한 흔적이 있다’는 형식으로 한일관계에 배려했다는 견해를 일제히 전했다. 일본정부는 한국에 약점을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한다.」라고 하여 일본정부의 소극적인 독도 영토정책이 영유권을 불리하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명기와 비교하면서는 「역으로 한국교과서에서는 죽도(한국명·독도)가 한국영토라고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해설서의 기술을 유보한 것은 영토문제에서 후퇴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여 ‘죽도’ 영유권 기술을 유보했다는 주장은 사실왜곡이다.

鈴木寛 문부과학부대신이 ‘죽도’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민주당이 학습지도요령의 대강화(간소화)를 내걸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북방영토나 죽도가 일본영토이고, 불법점거당하고 있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은 대강화와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北海道 교직원조합이 작년 ‘죽도’에 대해, 「한국의 주장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라는 자료를 학교에 배부하는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이들 모두 산케이신문은 독도문제를 전적으로 일본영토로 단정하는 것은 공정한 보도를 지향하는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산케이신문은 현재의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지리A에서 6권, 지리B에서 5권에 「일본고유의 영토 죽도에서 한국 사이에 영유권문제가 있다.⁶¹⁾」라고 기술하여 독도를 일본영토로서 교육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사실을 누락하는 방식의 편협한 논조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일본은 1905년의 영토편입조치를 유일한 영토적 권원으로 제시하지만, 일본의 무조건적인 항복으로 포츠담선언에 의거하여 청일전쟁 이후 확장한 영토가 불법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일본영토에서 박탈되게 되었다. 독도도 여기에 속한다. 독도는 한국독립 후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게 되었고, 점유한 상태에서 1946년 1월의 SCAPIN 677호에 의해 침략한 지역으로서 일본영토에서 정식으로

60) 동북아역사재단편,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1부 1948~1976년』 동북아역사재단, 2009.

61) 전계의 「読売社説：指導要領解説書 ‘竹島’に触れないのは問題だ」.

로 분리되었다. 게다가 연합국은 1951년 9월의 대일평화조약에서는 한국이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독도지위 규정을 회피하였다. 전후 일본은 SCAPIN 677호를 바탕으로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사실상 1965년 한일협정에서도 한국의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은 반대하지 못했다.⁶²⁾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이것이 독도문제의 본질이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학생들에게 교육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케이신문처럼 독도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여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교육시켜야한다는 주장은 한일 간의 분쟁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처럼 산케이신문은 사건을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취향에 맞게 사실왜곡을 서슴지 않는 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독도문제에 관해서도 일방적으로 한국 측의 주장을 부정하고 일본 측의 주장만 정당하다고 기술하는 경향이 강하다.

(5) 중앙일간지 「讀賣新聞」

요미우리신문에서도 이번 고등학교 사회과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교육을 의무화한 내용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독도의 역사적 근거에 대해서는 「죽도는 늦어도 江戸시대 초기의 17세기 중엽에는 일본이 영유권을 확립하고 1905년 각의결정을 거쳐 島根縣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한국은 1952년 국제법에 반해서 일본해에 ‘이승만라인’을 일방적으로 설정한 이후 죽도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다. ‘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도 우리나라의 고유영토’라는 것은 일본정부의 견해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외무성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외무성이 일본의 국익을 위한 명목적인 것에 불과한 논리임에도 불구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의 논리왜곡에 동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죽도’라는 명칭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미래를 짚어지고 갈 세대에게 자국의 영토나 역사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중요하다. 문부과학성은 2013년도부터 실시하는 고교지리A, 지리B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일본영토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죽도’라는 명칭을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은 큰 문제이다.」 「문부과학성은 ‘죽도는 우리나라 고유영토라는 입장은 변함없다.’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그렇게 병기해야하지 않을까? 중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발전시켜서 고등학교에서는 기술을 후퇴하는 것은 모순이다.」 「이번

62) 전계의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1부 1948~1976년』 참조.

해설서는 출판사나 교원에게도 죽도를 경시해도 된다는 오해를 가지게 할 수 있다.」 「영토문제나 그것을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것은 국가의 근간과 관련되는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이다. 외교상으로 배려하여 왜곡해서는 안 된다. 죽도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의 해결은 용이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서 국제사회에 일본의 입장을 발신해갈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일본정부의 독도정책을 비판했다.⁶³⁾ 요미우리신문은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대전제로 하여 일본정부가 죽도영유권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정히 보도하여 사실관계를 전달해야할 매체가 한쪽의 입장만 과장되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매스컴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이것은 또한 독도의 본질을 왜곡하여 한일 간의 분쟁을 선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5.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과 문제점

이번 사태에 대해 한국의 모든 매스컴은 일본의 새로운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가 영토문제에 관해 「죽도」라는 명칭을 거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라고 하여 일제히 일본을 비난했다. 매스컴은 기대했던 「鳩山 정권에 실망했다.」 라고 강한 어조로 보도했다. 특히 川端達夫 · 문부과학대신이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죽도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종래의 정부 공식적 입장을 반복 것에 대해 「망언」 이라고 비난했다.⁶⁴⁾

그런데 정부입장으로서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고수한 것에 대해 한일 간에는 영토문제가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먼저 일본정부가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한일 간에는 어떠한 영토문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고유한 우리 영토라는 사실을 외교경로를 통해 일본에 전달해 왔다.」 「일본의 미래세대에게 그릇된 영토관념을 주입해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했다.⁶⁵⁾ 「정부는 그러나

63) 전계의 「讀賣社説：指導要領解説書 ‘竹島’に触れないのは問題だ」.

64) 「韓国, 竹島で非難キャンペーン “友愛外交”効果無し」, 『産経ニュース』 2009년 12월 26일

65) 전계의 「정부, 유감 표명...“한일 영토문제 없다”」.

영토문제를 거둬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했다.]」⁶⁶⁾ 그러나 지난해 7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독도를 명기하며 영유권을 주장했을 때 비난 성명을 내는 등 강력히 대응했지만, 이번에 「죽도」 명칭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은 한국을 배려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⁶⁷⁾

이번 민주당정부는 독도 영유권문제로 한일관계의 악화를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8년 7월 중학교 교과서에 이어 10년 만에 고등학교 교과서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게 된 상황에서 독도문제로 고민을 했던 것이다. 외무성이나 문부과학성에 소속된 관료들의 인식은 과거나 지금이나 그다지 변화가 없었다. 사실상 일본은 정당 간에 정권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관료사회를 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 그래서 민주당정부가 최대한 한국을 자극하지 않는 방도로서 채택한 것이 「죽도」라는 명칭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문부과학성 관료들의 의사가 전적으로 반영되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교육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반면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번 사태가 한국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다. 한국정부는 물론이고 한국국민들 사이에는 일본정부가 배려한 흔적이 있었다고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죽도교육의 의무화라는 일본의 의도가 달성되었기 때문이다. 과거 자민당 정부가 「죽도」라는 명칭을 표면에 집어냄으로써 한일 간의 외교적 충돌을 유발하여 한국의 외교적 협력을 받아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교적 마찰로 정권을 포기해야하는 상황도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하면 민주당정부는 한국의 반발을 극복하여 성공적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다.

이번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죽도」명칭의 직접적인 표기를 회피한 것은 결코 한일양국이 윈-윈한 것이 아니다. 일본의 외교적 승리로서 한국의 독도외교의 실패로 정리된다. 일본은 이번 조치로 2013년 교과서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할 때 「죽도교육의 의무화」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6. 맺으면서

이상으로 이번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개정에 있어서 고등학교에서 독도 교육을 의무화한 것을 둘러싸고 일본국내에서 죽도 영유권을 적극적

66) 전계의 「정부, 유감 표명...」한일 영토문제 없다」.

67) 전계의 「정부, 유감 표명...」한일 영토문제 없다」.

으로 주장하는 자와 소극론자 간에 약간의 갈등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했다. 이는 일본정부의 의도였다. 그런데 ‘죽도’라는 명칭을 직접 명기하지 않았다. 이는 과거 소원했던 한일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교육지책이었다. 죽도 영유권의 적극론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한국의 반발을 최소화하여 한일관계를 그다지 악화시키지 않는 대안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둘째, 소극적인 ‘죽도’ 영유권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민주당정부 측과 진보언론인 아사히신문 등이 있다. 그러나 이를 주도한 문부과학성 관료들은 ‘죽도’ 명칭을 명기하지 않아도 죽도 영유권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아사히신문은 이번 조치가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의 입장을 공정하게 교육하는 것이라서 바람직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이처럼 이들 모두 일본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셋째, 적극적인 ‘죽도’ 영유권자들은 고등학교에서의 ‘죽도’ 교육이 의무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비난했다. 한국의 입장을 배려하여 ‘죽도’ 명칭을 누락한 것은 ‘죽도’ 영유권을 훼손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주체는 보수정치인, 보수언론으로서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시마네현 관계자 등이 있다.

넷째, 한국정부는 이번 조치가 다소 한국을 배려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2008년 7월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했을 때와는 달리 주일대사를 소환하는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잘못된 대응이다. 이번 조치로 일본정부는 한일관계에 있어서 그다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던 것이다.

다섯째, 국가 간의 외교에는 ‘배려’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일본은 ‘배려’라는 검은 장막을 치고 계산된 엄청난 국익을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다시 한 번 영토정책에 있어서 ‘조용한 외교’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했다.

【參考文獻】

- 동북아역사재단편(2009) 『일본국회독도관련기록모음집 -1부 1948~1976년』 동북아역사재단.
- 제주평화연구원편(2010) 『동아시아평화의 미래』 한국학술정보(주), p.257.
- 大西俊輝(2003) 『日本海と竹島一日韓領土問題』 東洋出版.
- 奥原碧雲(1907) 『竹島及鬱陵島』 報光社.
- 川上健三(1963.8) 『竹島の領有』 外務省条約局.
- 川上健三(1966) 『竹島の歴史地理学的 研究』 古今書店.
- 梶村秀樹(1978) 『竹島＝独島問題とは何か』, 『朝鮮研究』 第182号.
- 佐藤正人(1996) 『国民国家日本の独島占領—第7次国際歴史教科書学術會議総合報告書・世界化時代の歴史学教科書』 国際教科書研究所.
- 下条正男(2004) 『竹島は日韓どちらのものか』 文春新書377, 文芸春秋社.
- 下条正男(2005) 『‘竹島’その歴史と領土問題』 竹島・北方領土返還要求運動島根県民会.
- 芹田健太郎(2002) 『日本の領土』 中公叢書.
- 芹田健太郎(1999) 『島の領有と經濟水域の領域画定』 有信堂.
- 田村清三郎(1955) 『竹島問題の研究』 島根県総務部広報文書課.
- 田村清三郎(1965) 『島根県竹島の新研究』 島根県総務部総務課(松江).
- 高野雄一(1962) 『日本の領土』 東京大学出版会.
- 竹島問題研究所編(2007. 3)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最終報告書—』 竹島問題研究所.
- 竹島問題研究所編(2006. 3) 『竹島問題に関する調査研究—中間報告書—』 竹島問題研究所.
- 太寿堂鼎(1998) 『領土帰属の国際法』 東信堂.
- 塚本孝(1996) 「竹島領有権問題の経緯〔第2版〕」, 『調査と情報』 第289号, 国立国会図書館.
- 帝國書院編集部編(1987) 新詳高等社會科地図』 四訂版, 帝國書院.
- 内藤正中(2000)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韓関係史』 多賀出版.
- 堀和生(1987) 『1905年日本の竹島領土編入』, 『朝鮮史研究会論文集』 第24号.
- 山辺健太郎(1965.2) 「竹島問題の歴史的考察」, 『コリア評論』 第7巻 第2号, pp.4-14.
- 「竹島問題」, <http://yahoo.co.jp/>
- 「web 竹島問題研究所」, <http://yahoo.co.jp/>

要 旨

本稿は現在多文化、多民族社会に入った日本社会の中で最も大きな外国人集団である在日コリアンの祭りとマダン劇を分析対象にする。先行研究としては在日コリアンの祭りについて2000年以後から日本国内では少しずつ行われている状況である。しかし、韓国国内ではほとんど見当たらない状況である。更に在日コリアンの祭りの中で行われるマダン劇についての先行研究は全然見当たらず、研究がまだ始まっていないといってもかまわないほどの状態である。このような状況の中で本稿は在日コリアンの最初の祭りである生野民族文化祭を分析対象にする。

分析で用いる概念は場所性、ローカリティー、他者そして、カーニバルである。場所性に基づいて、どうして大阪市生野区で最初の在日コリアンの祭り（生野民族文化祭）が形成されたのかを論じ、また、それをローカリティー、他者と関連づけて、その空間の境界地としての新しい文化の発散の可能性を認めた。そして、マダン劇についてはバフチンのカーニバル理論を用い分析を行った。その結果、マダン劇はカーニバルの上下の転覆性が十分認めることができた。更にマダン劇は在日コリアンだけではなく、日本人にも多文化に接する機会を与えていた。以上のような点から在日コリアンの祭りとマダン劇は意義深い文化要素の一つであることが十分認められると考える。

キーワード：学習指導要領解説書、竹島領土積極論者、竹島領土消極論者、
竹島、独島

투 고 : 2010. 2. 28
1차 심사 : 2010. 3. 13
2차 심사 : 2010. 3. 27